

미국 중간선거 전망
이슬람 논란

5, 6면

- 유럽의 무슬림 마녀사냥

4면

- 이슬람은 여성을 억압하는가

4~5면



북한 핵실험과
대북제재

3면

한미FTA

4차 협상 평가

존 몰리뉴 칼럼 - 지배 전략

8면

7면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구속자를 전원, 즉시 석방하라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비롯
해 다섯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됐다. <조선일보>는 벌써부터 “김대중 정부
이후 최대 간첩 사건이 될 것”이라고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터뜨린 이른바 ‘일심회’ 사
건은 아직까지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다.

그래서 검찰조차 이 다섯 명을 ‘간첩’ 혐
의가 아니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
다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위반 혐
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 적용이
다. 고위관료·정치인·재벌총수 등이 방
북해 북한 ‘기관원’ — ‘기관원’과 ‘공작
원’을 구별하는 기준은 없다 — 을 만나는
것은 “남북 교류협력”이고 민주노동당 당
원이 그렇게 하면 ‘이적 행위’란 말인가.

더욱이 2000년 6·15 이후 연인원 1백
20만 명이 방북했고, 지금도 해마다 30만
명 이상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중국 등에서
북한 주민과 마주치고 있다.

국정원의 수사는 장민호 씨와 손정목 씨
가 작성한 보고서에 근거해 있다. 그러나 장

민호 씨는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을 부인하
고 있다. 또, “최[기영] 부총장은 일심회와
관련이 없다”고까지 진술했다.

국정원은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겠다”
며 장민호 씨를 협박했고, 최기영 씨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최기영 씨에게 “성적 모욕”
을 주었다고 한다.

북한이 ‘일심회’에 내린 지령이라는 것도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무산 경위
파악’, ‘환경 문제를 끌어들이 시민단체를
반미 투쟁에 끌어들이는 방안’ 등이다. 이것
들은 모두 국내 언론이나 인터넷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 “국가 기밀”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우익은 “386 운동
권들이 간첩 활동을 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방북마저 문제 삼고 있다. 북한 핵실험을 빌
미로 “전쟁 불사”를 외치던 자들이 이제 진
보진영을 향해 광기 어린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다.

보수 언론은 여중생 사망 혐의 운동, 미
군기지 반대 운동, 한미FTA 반대 운동 등

에 구속자들이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제국
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맞선 운동들에 ‘친북’
색깔을 입히며 음해하려는 것이다.

이런 우익의 광적인 선동에 청와대 대변
인 윤태영은 “간첩단 수사는 김[승규] 원장
의 진퇴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될 것”
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열우당 보수파는 말할 것도 없고
‘386’들도 소심함과 기회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열우당 대변인 이상호는 “국정원이
아무 근거 없이 조작 사건을 만들 기관이 아
니”라며 마녀사냥을 편들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옳게 지적했
듯이, 이 사건은 “노무현판 공안 사건”이
다. 게다가 국정원은 이 사건의 수사를 시
민사회단체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할 듯하
다. 조만간 추가 사건이 터질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진보진영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떠
나 자신에 대한 우익과 정권의 마녀사냥에
항의하는 강력한 운동을 벌여야 한다.

» 2면으로 이어짐





인용해도 될까요?

“[국가정보원의 죽었던 기능이 기적 같이 되살아나고 있다.

… 김승규 원장, 역사는 그를 의인(義人)으로 기록할 것이다.”

— 마녀사냥에 환호하는
뉴라이트 신지호

“학생운동을 졸업하고 살아오다 보니 [연행자들과] 길이 달랐다.

… 국정원도 과거처럼 아무 근거 없이 조작사건을 만들거나 공작적인 수사를 하는 기관은 아니다.”

— 열우당 386 우상호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여서 쿠바의 관타 나모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

“결혼해서 혁명 부부를 이루기 위해 전처와 이혼한 것 아니냐”

— 국가정보원이
연행자들에게 했다는 협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해 놓고 우파 친재벌 정책을 폈다.

… 친미자주리면서 미국 네오콘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

… 정치행태는… 집탕누대기정당이다.”

— 탈당한 전 열우당 의원
김성호의 열우당 비판

“국회에서 떠들면 해결될 게 별로 없어요.

… 솔직히 말해서 포스코한테서 정치자금 안 받은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어. … [문만 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예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와대 마친 가지고요.

저기 특히 언론은 더 심합니다.”

— 포스코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중소기업주를 타이르는 공정위 직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 인천시장 안상수

학교 행정실장 : 나이 많고 임금 많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돈이 없는데 자르는 거 당연한 거 아
닙니까?

해고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 모범답안입니다.

— 학교 비정규직 해고에
맞장구치는 관료들



새로 나온 팸플릿

기후 변화
왜 핵 에너지는
대안이 아닌가

기후 변화
왜 핵 에너지는
대안이 아닌가

마틴 앨슨 지음
최수진, 한성근 옮김
가격 2,500원

권위주의 세력의 마녀사냥에 맞서 단결할 때

» 1면에서 이어짐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올해 들어 10년 만에 증가했다. 우익 세력이 북핵 위기의 속죄양을 찾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를 꺼내들고 있다. 이 무기는 지지도가 10퍼센트대에 불과한 노무현의 심각한 정치 위기의 속죄양을 찾는 것과도 관계 있다.

노무현은 “집권해 보니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알겠더라”는 김영삼의 전례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편집증적인 우익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회에서 압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열우당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국가보안법의 골간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은 초당적으로 이 나라 지배자들이 변함없이 애용하는 무기 중 하나이다.

사임한 국정원장 김승규의 다음과 같은 말은 국가보안법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 보여준다. “지금은 더없는 안보위기 상황으로 이럴 때일수록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간첩 검거에 전력해야 한다.”

지금 탄압의 칼끝은 민주노동당을 향해 있다. 한미FTA 반대 운동과 반전 운동을 주도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의 온상’처럼 몰아가려 한다. 11월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파업의 예봉을 꺾기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이기도 하다.

단결

특히 <조선일보>는 민주노동당 내부의 갈등을 아비하게 파고들고 있다. “이번 사건이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에 우호적인 NL계열과 비판적인 PD계열이 대응 방법을 놓고 분열상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자율과 연대’가 마녀사냥당한 동료 당원들을 방어하기는커녕 북한의 “구시대적 대남 사업”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우익의 기만 살려 줄 뿐이다. ‘자율과 연대’는 대북 공포증과 자민통계열에 대한 분파주의에 눈이 멀어 피아 식

별을 못하는 정치적 맹인이 돼선 안 된다.

이들을 보노라면, 1940년대 말에 스탈린주의를 서방 시장자본주의보다 더 나쁜 것으로 여겼던 막스 샤프트만 등 일부 미국 지식인들이 사회민주주의로 이동했다가 훗날 ‘자유주의적 반공주의자’로 변신한 역사적 경험의 떠오른다. (‘자율과 연대’의 입장에 대한 ‘다함께’ 운영위원회의 비판은 www.alltogether.or.kr를 보시오.)

민주노동당이 창당 이래 가장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진’처럼 비중 있는 당내 의견그룹이 침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탄압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좌파’답지 못한 태도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배자들의 공격에 맞서 동지들을 방어해야 한다.

지금 보수 언론들은 ‘간첩’, ‘이적행위’ 따위의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대중 속에서 반공·반북주의 공포심을 조장하려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반대 운동,

10월 27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열린 항의 집회

이라크 점령 반대 운동,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친북’적인 것도 아니고 ‘이적 행위’도 아니다.

진보진영은 지배자들의 마녀사냥에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 반격에 나서야 한다.

1950년대 초 미국의 매카시 상원의원과 ‘비(非)미국인적 활동조사위원회’가 불러일으킨 매카시즘 광풍은 1950년대 말 저항에 의해 크게 약해졌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과 ‘학생비폭력 조정위원회’(SNCC) 활동가들은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보수 언론의 비난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SNCC 활동가 찰스 셰로드의 다음과 같은 말은 지금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녀사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 준다.

“나는 지옥의 사자라도 개이지 않는다. 누구든 기꺼이 맨 앞줄에 나와 함께 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환영할 것이다.”

김인식

〈맞불〉창간을 축하하며

들불처럼 일어나서
주류 언론과 기득권 세력의
가치관에 ‘맞불’을 놓아라!

〈다함께〉가 주간지 〈맞불〉로 발전한 것을 축하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간지로까지 발전하길 바랍니다.

박거용(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사회당의 시각교정을 위해

미국은 왜 북한을 적대하는가?

북한 핵실험의 원인을 미국의 압박과 분리하는 경향이 일각에 있다. 금민 사회당 대표는 북한 핵실험이 “내부 단속용”이자 “냉전 이후 세계체제에 유리한 지위에서 참여하기 위한 카드고, 객관적인 안보 위협과는 상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북한 자체이고 이는 북한 체제의 “이종성(異種性)에 기인한 고립”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북한이 ‘악의 축’이라는 조지 부시의 선전만큼이나 북한을 ‘정상 국가’와는 다른 모종의 괴팍한 국가로 암시한다.(제국주의자들은 종종 인권·테러·독재 등의 ‘이종성’을 들어 전쟁을 합리화했다.) 또한 제국주의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다.

물론 북한은 옛 동유럽 스탈린주의 붕괴 후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에 편입하고자 했다. 1991년 북한은 “제국주의 소굴”이라던 유엔에 남한과 동시에 가입했다.

1994년 김일성은 통일이 될 때까지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했고, 1996년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은 “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그 동안 북한은 비록 지그재그를 했어도 큰 그림에서는 2004년 7·1 조치에서 보듯이 ‘시장 개혁’의 길을 걸었고 WTO 가입을 희망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나 미국은 ‘이종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 빈 라덴표 테러의 원산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식 자유주의와 비슷하기는커녕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왕정 독재인데도, 미국은 그 나라를 동맹으로 삼았다. 또, 군부 독재체제이자 이슬람주의자들이 지배계급 핵심 일부이기도 한 파키스탄의 핵을 용인하기도 했다.

추상적 단정을 피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핵실험은 제국주의 압박의 결과물임이 분명해진다.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패권 전략과 관련 있다. 탈냉전기 미국 지배자들 사이에 퍼졌던 도취감이 우려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유럽연합·중국 등 경쟁 강대국들의 부상을 걱정해야 했다. ‘신 세계질서’라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냉전 해체 이후 세계체제는 여러

강대국들 간의 경쟁이라는 다극 체제로 나아갔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매우 약해졌지만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점을 활용하려 했다. 그래서 미국은 밀로세비치나 후세인 같은 작은 강패들을 다루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통해 다른 열강들을 견제하려 했다.

동아시아에서 북한 핵은 1990년대 초 미국이 일본과 사이가 벌어진 것을 봉합하는 좋은 구실이 됐다. 물론, 이런 봉합의 표적은 일본 자체와,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될 것이었다. 미국은 북한을 빌미로 일본과 중국을 ‘관리’하려 한다.

반제국주의 운동

따라서 현재 북핵 위기는 탈냉전기에 더 불안정해진 새로운 제국주의 질서에서 비롯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런 압력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북핵을 둘러싼 열강들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천에서 반제국주의 운동 회피라는 커다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금민 대표의 주장은 “북한의 핵도전”에 “미국이 사실상 기권”한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중국과 미국의 힘에 의지한다. “평화세력은 3+3 비핵평화체제를 5자 합의[북한 불참의 경우]의 목표로 제시하고 [6자회담에서]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제해야 한다.” ‘3+3체제’는 남한·북한·일본이 비핵선언을 하면 핵보유 3국인 미국·중국·러시아가 비핵선언 3국의 비핵화 유지 여부를 감시하고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3체제’는 사실상 현재의 NPT 체제를 동아시아로 축소한 것일 뿐이다.

현실의 NPT는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 아니라, 열강들의 경쟁 논리 때문에 사실상 핵확산을 막지도 못했다. 이것은 ‘3+3체제’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

그는 ‘3+3체제’가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한 일보”라고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핵 보유가 ‘조선반도의 궁극적 비핵화를 보장한다’는 북한 관료의 인식만큼이나 단견이다. 동북아 위기 주범인 제국주의 질서 자체에 애로부터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규한

대북제재의 칼 끝은 바로 이런 아이들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옥죄고 긴장을 높일 대북제재

한규한 유엔의 대북제재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 품목에 잠정 합의했고 최종 목록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 잠정 합의 과정에서 중국·러시아 등 북핵 관련국들 사이의 이견이 드러났고, 그래서 성에 차지 않은 부시는 미국 단독의 “추가 제재” 운운했다.

그렇다고 유엔 합의안이 부드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제재 대상에 속할 수 있는 품목은 매우 광범하다. 화학비료나 의약품은 물론, 심지어 냉장고, 486급 컴퓨터, 병어리 장갑,

낚시대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류젠차오는 “대북 원조 삭감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중국 역시 ‘회초리’를 들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은 벌써 중유 공급의 3분의 2를 줄였고, 국경 지대에 중국군 3개 사단을 추가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중이다.

부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엄격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지난 미사일 발사 이후 “제재는 곧 선전포고를 뜻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중국 특사 탕자쉬안에

게 “추가 핵실험 계획은 없다”며 미국과 대화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지만, 미국은 이를 단칼에 잘랐다. 심지어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도 … 제재가 거둬질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런 제재를 위해서라도 북한을 거칠게 다룬다는 인상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 도박에 나선다면 그 책임도 주로 부시에게 있는 것이다.

유엔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을 재앙으로 몰고 갈 뿐이다. 유엔의 제재 일체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북한 주민 목조르기에 동참하는 노무현

“전쟁도 불사”하자는 남한 우익과 미국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사업도 중단하라고 압박한다. 한편 금강산 관광과 개성사업 중단에 반대하는 남한 정부의 대북제재는 과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그러나 노무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유엔 제제안만큼”이라고 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오히려 남한 정부는 이번 유엔 잠정합의안의 기준에 바세나르협약 기준을 더한 ‘전략물자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를 마련해 냈다. 이 ‘공고’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품목은 지난 1991년 이래 1백만 명의 이라크인을 학살한 UN 경제제재 때보다 광범하다. 게다가 지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남한 정부는 이미 쌀과 비료 지원은 물론 수해 물자 등 인도적 지원까지 중단한 상태다.

남한 정부 일각에서는 군사적 충돌을 낳을 수 있는 미국 주도의 PSI에 참가하려는 흐름도 있다. 미국의 압력을 ‘절충 수용’하자는 것이다.

노무현식 포용정책의 위선은 다른 면에서도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탄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비밀리에 사정거리 1천 킬로미터급 순항미사일을 2년 전부터 실전배치해 놨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움직임 등을 막기

위해 선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개념계획 5029를 수정·확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를 보면, 한나라당의 전쟁불사론에 대해 84.5퍼센트가 반대했다. 북핵 정세 속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5퍼센트 가까이 하락했다.

이 연구소는 북핵 위기가 “열우당에게는 악재이면서도 이슈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호재이기도 했으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지지도 침체 상태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이 북핵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대북제재에 반대하면서 남한 정부의 모순을 들춰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슬림 혐오는 유럽 정부들의 지배 전략이다

10월 11일치 <뉴욕타임스>는 “유럽이 무슬림 소수자에 관한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주류 정치권 인사들이 유럽적 가치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슬림 혐오는 고립을 ‘자초’ 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대중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유럽 지배자들 거의 전체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유럽 지배자들이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중요한 맥락이 있다. 유럽 정부들은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 삼아 중동 지역에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 인종신앙관계 장관 필 올라스가 학교에서 베일 벗기를 거부한 교사 아이샤 아즈미를 해고했고, 나치들은 무슬림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위협

유럽에서 두번째로 많은 무슬림 이주자들[주로 터키 출신]이 사는 독일의 경우, 최근 바이에른 주 교육부장관이 히잡이 정치적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바바리아주 정부는 학교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베를린의 한 극단이 무슬림들의 반발을 격정해 무하마드의 잘린 머리가 나오는 오페라의 상연 연기를 두고 “극단주의자들에게 굴복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사실, 어떤 무슬림 단체도 극단을 협박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메르켈은 이것을 무슬림들이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사례로 곱해하려 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독일 군사 전략 보고서를 보면, 독일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 등 해외 파병을 늘리기 위해 군대를 “혁명적으로” 개편하려 한다.

독일은 이미 아프가니스탄(2천8백 명)과 레바논(2천4백 명)에 군대를 파병했다. 파병이 인구의 다수가 무슬림인 곳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슬림 마녀사냥을 강화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독일 병사들이 시신을 모독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 지난해에 폭로됐다. 이 때문에 철군 여론이 강화될까 봐 두려워하는 독일 정부는 무슬림 마녀사냥의 고삐를 계속 바짝 죄려 할 것이다.

유럽 최대의 무슬림 인구가 사는 프랑스의 경우, 무슬림 혐오 뒤에는 ‘테러와의 전쟁’ 동참(아프가니스탄

에 9백 명, 레바논에 4백 명 파병)과 신자유주의 개혁 외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있다. 유력한 대선후보인 내무부 장관 니콜라 사르코지는 극우를 포함하는 우파들을 지지자로 동원하려 한다.

사르코지는 무슬림 이주자 문제에 서 “프랑스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떠나라”라는 나치식 구호를 채택했다. 그는 최근에 한 교사가 무슬림 혐오 내용 이 담긴 신문 칼럼을 쓴 뒤 지탄을 받으면서 그것이 우파들을 결집시키는 정점이 되자 내심 즐거워하고 있다.

또, 프랑스 경찰들은 빈민촌 소요 일주년이 다가오자 ‘방리유’(파리 외곽 교외)가 ‘상시적인 인티파다’ 상태라고 말하며 무슬림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겼다. 사실, 지난해 프랑스 소요는 ‘급진 이슬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소요 후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의 쥐고리만큼만 주면서 진압 경찰을 풀어놓는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10월 17일 총리 로마노 프로디가 “여성이 베일을 쓰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녀를 볼 수 있어야만 한다”고 말해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쓸 수는 있어도 얼굴을 가리는 ‘니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영국의 전 외무부 장관 잭 스트로와 같은 입장이다. 이것은 프로디 정부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파병(3천 명)을 연장하고 레바논에 대규모 파병(3천 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 있다.

‘니깅’

이런 무슬림 혐오에 반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프랑스의 한 여성 운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존재하는 분열을 뛰어넘어 공통의 적에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아니면 지배자들이 인종적 분열을 이용해서 우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느냐가 걸려 있다. 이 때문에 지배자들이 베일 논쟁을 그토록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11월 18일 영국전쟁저지연합이 주최하는 ‘이슬람 혐오와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민중의회’ 같은 행사가 중요하다.

민중회의가 제기한 두 가지 문제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반전 운동은 부시의 전쟁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무슬림에 대한 공격에 대응할 것인가?” 는 다른 유럽 나라의 활동가들도 한 번 곱씹어 볼 만한 것들이다.

김용욱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히잡을 벗으라고 가혹하게 압력을 가했지요 … 그녀에게 있어 히잡은 단지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오르한 파묵의 <눈> 중에서

최근 유럽 지배자들은 이슬람이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라고 내놓고 주장하거나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흔히 이란 등 중동 각국 무슬림 여성의 상황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사실, 중동보다 다른 지역에 무슬림들이 더 많은 뿐 아니라, 이슬람과 여성의 관계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오늘날의 이슬람 학자들은 초기 이슬람 역사에서 일부 여성 무슬림 지도자들이 했던 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 당시에 코란은 여성의 재산상속권을 포함해서 다른 종교보다 여성의 권리를 더 많이 보장했다.

물론 코란에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시대상의 반영이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만큼 매우 모호한 구절들이다. 그리스도교 성경에도 이런 구절들이 많다.

이슬람을 비난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다른 종교들에 적용해 보면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기준

일례로 구약성서의 ‘레위기’에는 노예 소유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 그렇다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오늘날 노예 소유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스라엘 언론들은 중동의 가장 폭력 사례를 들면서 이슬람이 여성 학대를 고무한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정 폭력 발생률이 이웃인 이집트와 비슷하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유대교에서 찾아야 할까?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여성 억압이라는 주장을 처음 퍼뜨린 것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이었다.

19세기 영국은 이집트에서, 프랑스는 알제리에서 식민 점령과 통치를 정당화할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이슬람으로부터 여성을 구한다고 주장했지만 제국주의자들은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 통치 하에서 여성 교육은 전혀 확대되지 않았고, 1950 — 60년대까지 중동의 여성 문맹률은 90퍼센트에 달했다. 중동에서 여성 의무교육이 실행된 것은 식민 통치를 물리치고 독립 정부가 수립된 후였다.

정체성

더구나, 제국주의자들의 변명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면, 제국주의 점령 하에서 왜 평범한 여성들이 무슬림 정체성을 포기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례로 1958년에 알제리 민족해방 운동 조직은 이렇게 선언했다. “혁명의 첫날부터, 여성들은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존엄성을 얻었다 … 갈수록 많은 여성들이 베일을 착용하고 있으며 … [이것은] 그들의 애국심을 증명하는 상징이다.”

베일의 사례를 보면 제국주의자들의 거짓말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먼저, 각종 ‘베일’은 사실 쿠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레일라 아흐마드는 <《이슬람에서의 여성과 젠더》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고전 고대 시대에는 베일 착용이 왕실과 귀족의 특권이었다. … 그것은 유대

교와 그리스도교 여성들의 공공 생활로부터의 은둔을 보여 주는 상징이었다. 오늘날 이란에서 많이 이용되는 베일의 형태인 차도르는 원래 텐트를 의미했는데, 그것의 기원은 부유한 여성들이 여행할 때 천으로 뒤덮은 가마를 이용하는 이슬람 이전의 전통이다.”

근대 이전 시기의 서구에서 무슬림 여성과 베일을 결합시키는 전통은 없었다. 예를 들어, 서구 중세나 르네상스 문학 속의 무슬림 여성은 베일을 쓰고 있지 않았다. 파에게 쉬라지는 <《베일을 벗기다》에서 서구 국가들이 중동을 식민지로 삼기 시작하면서 베일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들이 각종 매체에 무슬림 여성의 전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일과 단어들》의 저자인 파르자네흐 밀라니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중 매체들이 베일을 다루는 태도는 미국과 ‘이슬람 세계’(주로 중동 국가들)의 관계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제국주의 시대 이후 중동의 많은 여성들은 식민 통치와 제국주의의 억압에 대한 항의로 자신의 무슬림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베일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베일이 무슬림 여성의 상징이 됐다.

19세기에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지로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현상이 단지 여성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많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전통적’ 무슬림 복장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억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슬림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에 한정된 경향이 아니었다.

물론 이슬람을 여성 억압의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려 한 국가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이슬람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수탈,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실패 속에서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 안식처이자 때로는 그것들에 대한 투쟁의 상징이 됐다.**

1920 ij 30년대 터키에서 무스타파 케말은 자본주의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억압적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슬람을 전근대의 상징으로, 정치적 이슬람 조직들을 반동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식민지

케말은 1934년부터 베일 착용자를 차별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 뒤 터키의 군부 독재 정권들은 공공 장소에서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베일을 착용한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학생들을 학교에서 퇴학시키고 의원들을 국회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터키에서는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베일이었다. 이런 경향은 터키 세속 좌파들의 패배에 따른, 정치적 공백 상황에서 더 확산됐다. 터키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가 오르한 파묵의 <눈>은 이런 상황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 이란 국가는 베일 착용을 강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란의 많은 하층계급 여성들 사이에서 이슬람과 베일 착용은 여전히 일상의 억압을 견디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다. 이란에서는 이슬람에 근거해 여성해방을 피하는 ‘이슬람 페미니즘’의 활동이 활발하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시

린 에바디도 그 중 한 명이다. 이것은 이슬람을 국가의 억압 이데올로기로 사용하려는 이른바 ‘신정 국가’ 이란에서조차 이슬람을 단지 여성 억압 이데올로기로만 볼 수 없음을 뜻한다.

이집트에서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의 다른 어떤 조직보다 여성이 많이 참가하고 있는 조직이다. 많은 여성들이 권위주의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정치적 이슬람을 택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정체성은 불균등한 자본주의 발전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중동의 도시 노동자와 빈민 다수에게 일상의 삶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안식처이다. 많은 여성들은 자본주의가 약속하고 가져다주지 못한 여성 해방 공약(空約)에 환멸을 느껴 독실한 이슬람 신자로 변신했다.

자본주의 발전 속에서 도시 생활은 한 편으로는 농촌의 숨막히는 생활로부터의 탈출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위험, 즉 성적 괴롭힘, 노동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높은 실업률, 외모 지상주의 등의 압력에 노출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것의 극적인 예로, 이집트의 유명한 ‘배꼽춤희’들이 자신의 성적 이미지 착취를 지긋지긋해 하면서 독실한 무슬림이 되고 베일을 착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자본주의 발전을 추구한 권위주의 국가들은 여성의 일상적 고통을 이슬람의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이슬람과 여성의 관계는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무슬림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때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김용욱

미국 중간선거

이라크의 그림자로 뒤덮인 선거

11월 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시 정부와 공화당의 지지기반이 붕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부 지역 유권자들과 기독교 보수주의자 등 전통적 공화당 지지기반에서 이탈자들이 속출한다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들은 남부에서 부시와 공화당 지지율의 추락을 보고하고 있고, 기독교 보수단체들은 청년 신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명백히 공화당의 쟁점이 아닌 환경 문제를 주요 선거 쟁점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래서 공화당은 지금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으로 공화당의 각종 부패 스캔들, 경제 양극화, 이민자 문제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 점령의 위기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이라크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CNN 여론조사에서 64퍼센트가 이라크 전쟁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이라크 점령 실패 때문에 다른 쟁점들에서도 대중의 분노가 공화당으로 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연일 부시의 이라크 정책 실패를 두들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으로 민주당의 상하 양원 동시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근본적 이유는 **이라크 문제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대안이 민주당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자·동성애자 결혼 문제를 이용해 대중의 후진적 부위를 동원하려는 부시와 공화당의 전략이 2004년 대선 때처럼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비록 성과의 정도는 그 때보다 낮을 것이 확실하지만 말이다.

10월 27일 <USA 투데이>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민의 80퍼센트가 만약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구체적 철군 일정을 잡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 중 어느 누구도 구체적 철군 일정을 말하지 않고 있다.**

철군 일정

물론 이라크 점령이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 지배자들이 미국의 세계 제패 권락을 놓고 심각하게 분열하기 시작했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도 그런 논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놓는 대안의 상당수는 부시 정부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조지프 바이든이나 리처드 홀브루크 등 일부 민주당 중진들은 이라크 전역을 인종청소의 피로 물들일 것이 분명한 이라크 분할안을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는 즉각 철군에 반대해 ‘점진적 철군’을 주장한다. 일례로 민주당 전국위원장 하워드 딘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문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특수작전 인원을 중동에 계속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 이라크가 아니라면 이라크 주변에 말이다. 그 래야 테러리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흔히 지적되었듯이 ‘소심’해서 공화당에 감히 대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동에서의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유지한다는 대전제를 부시 정부·공화당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사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역사를 보면,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덜 호전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 베트남 전쟁을 확대한 것은 린든 존슨 민주당 정부였다.

>> 6면으로 이어짐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단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권력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5면에서 이어짐

요즘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외교 정책 차이를 보여 주는 사례로 대북 정책을 언급하는데, 10월 27일치 <뉴욕타임스>가 폭로한 미국 정부 기밀문서를 보면, 1994년에 클린턴 민주당 정부가 북한과 제네바합의를 맺은 유일한 이유는 대북 위협을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 5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흔히 클린턴 정부가 제네바합의 이후 실질적 이행에는 소극적인 이유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방해로 지적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만큼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했던 것이다.

현재 민주당의 우세는 민주당의 호소력 덕분이 아니라 이라크 점령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이다. <뉴욕타임스>가 말하듯이, “여론조사를 보면, 대중들은 변화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부시 정부 정책들의 지속보다는 모호하더라도[강조-인용자] 민주당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의 미래를 둘러싼 미국 지배자들의 분열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의회 내 세력 균형 변화는 세계 제패 전략을 둘러싼 지배자들의 이진투구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라크 점령이 종식돼야 한다고 믿는 다수의 미국인들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부시에게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이 두 요

인들이 결합돼 기층 반전 운동을 고무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치는 없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지지 입장인 유명한 신디 시한조차 “다수의 민주당 중진들이 반전 문제에서 형편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정의연합(UFPJ) 같은 대중적 반전 운동 세력이 독립 반전 후보보다는 민주당 당선에 더 열심인 것은 아쉬운 일이다.

독립

반전 운동의 일부는 양대 정당에서 독립한 진보진영후보를 냈는데, 녹색당이 대표적이다. 한국에도 강연을 왔던 마이클 버그 등이 녹색당의 반전 후보로 나섰다.

‘못 참겠다, 부시 정부 몰아내자’ 연합(‘World can’t wait, Drive out the Bush Regime’ Coalition)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 반대하면서 대중 행동 조직을 진행해서 10월 4일에

는 부시의 고문 허용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동시다발 시위를 벌였다.

아직은 작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독립된 정치 경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들은 매우 중요함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미국 주류 정치에서 중동 제패 전략을 둘러싼 정치적 분열이 더 심각해졌을 때, 그것이 미국의 중동 제패 전략의 종결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는 많은 부분 미국 반전 운동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달려 있고, 이것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적 축이 존재하느냐와 연관돼 있다.

그 동안 미국 반전 운동은 이 점에서 취약했고, 2004년에는 차악도 못 되는 민주당에 대한 차악론에 빠져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의 호전적인 이라크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면서 반전 쟁점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독립된 정치 세력 건설은 미국 반전 운동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김용욱

일시 : 11월 4일 오후 4시
장소 : 보신각 앞(종각 역)
주최 : 민주노동당

부시의 전쟁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수도권 반전평화 행동

Forums

서울 남부

영상 상영과 토론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11월 2일(목) 오후 8시

장소 : 한화오벨리스크(강남역 3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6495-9925

서울 동부

《민중의 호민관 차베스》 출간!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 “혁명 속의 혁명” 을 위한 전략

11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연사: 김인식(《땃불》 발행인)

장소: 동부여성플라자(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330-4624

시립대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혁명

11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문의: 010-2217-8514

한국외국어대

재무장으로 나아가는 일본

11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인문과학관 604호

문의 : 011-9744-1561

북한 핵실험

부산대

북한 핵실험 파장 : 어디로 나아가는가?

11월 1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인문대 315호

문의: 010-2530-9751

성공회대

북한 핵실험 파장 : 어디로 나아가는가?

11월 1일(수) 오후 7시

장소: 새천년관 7204호

문의: 011-9825-9753

성균관대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와 제국주의

11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문의: 010-6689-0088

단국대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와 제국주의

11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문의: 010-3122-1905

서울 중부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어디로

일시: 11월 14일(화) 오후 8시

문의: 019-647-3309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atgmail@nate.com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⑩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 I



존 몰리뉴

우리가 보았듯이, 자본주의는 착취를 바탕으로 한 계급 분열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극소수 특권층이 대다수를 지배하고 이들의 노동에 의존해 살아간다. 어떻게 그들이 대다수를 지배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 맑스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지적했듯이, 강제력과 동의를 결합시키는 것이 그 해답이다. 사실, 강제력과 동의는 아주 긴밀하게 결합돼 있고 서로를 강화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둘을 따로따로 다루겠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주로 국가다. 국가는 군대·경찰·법원·감옥·정부 관료기구 등의 제도들이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네트워크다. 사회 위에 군림하는 국가는 합법적 강제력의 독점을 비롯한 보편적 권위를 내세운다.

이 국가 기구는 각급 주무부서가 사회 전체의 이익, 즉 이른바 국익이나 공익을 구현한다고 자처한다. 그래서 경찰·판사·군장성 등은 항상 자신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공통의 국익이나 공익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신화일 뿐이다. 국민은 계급들, 즉 이해관계가 서로 정반대인 착취자들과 피착취자들로 이뤄져 있고, 국가가 대변한다는 사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라는 특정 사회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런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보존하는 것이고, 이 질서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력을 구현한다. 따라서 맑스의 말을 빌면, 국가는 “부르주아지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일 뿐”이다.

국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그 구성으로 나타난다. 군대·경찰·법원·행정기관의 상층은 압도적으로 부르주아지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그들은 부르주아지와 경제적·사회적·혈연적 연줄을 유지한다. 설사 하층민 출신의 개인이 이따금 상층으로 침투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 한편으로, 그런 개인이 승진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실제 계급 지위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그에 따라 그들의 견해도 바뀌기 십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자본주의적 작동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 승진의 조건이다.

국가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결과는 강제력 또는 강제력 사용 위협이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노동자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는데, 일을 마친 뒤 자신이 만든 제품의 일부나 전부를 집에 가져가려 한다고 치자. 그 노동자는 당연히 강제 연행돼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힐 것이다. 또, 어떤 공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90퍼센트의 노동자들만이 파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10퍼센트는 계속 일을 하려 한다고 치자. 경찰이 ‘법대로 하겠다’며 당장 상당수 병력을 공장 문 앞에 배치해 파업 파괴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직장폐쇄를 하고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하기로 결정한다면, 경찰이 또 들이닥치겠지만 이번에는 모든 노동자들을 집으로 확실하게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아무리 ‘노동권’을 호소해도 경찰은 꿈쩍도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 경찰은 ‘직무를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즉, 그들의 직무는 자본주의적 착취를 집행하는 것이다. 내가 말한 사례들이 너무 명백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역시 이 점이 중요하다. 자본주의적 착취는 그것을 승인하는 국법 — 국가의 강제력으로 뒷받침되는 — 이 없으면 단 5분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기에 국가의 강제력은 잘 드러나지 않고 배후에서 집행된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의 이익이 진정한 도전에 직면하는 순간 그것은 전면에 등장한다. 그런 도전이 외국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국가의 강제력은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 도전이 내부적인 것이라면, 그 도전은 탄압에 직면할 것이다. 그 도전이 선출된 정부가 제기한 것이라면, 국가의 강제력은 [그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군부나 파시스트의 쿠데타를 조직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1973년 칠레에서 피노체트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나 몇 년 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를 전복하려 한 쿠데타가 그런 경우다.

이 마지막 요점, 즉 현직 정부를 반대하는 부르주아지를 위해 국가 권력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이것은 국가 기구가 민선 정부에 복종한다는 공식 헌법의 관점(그리고 정치학이 널리 퍼뜨리고 각급 학교에서 가르치는 관점)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둘째, 그것은 20세기의 이른바 공산당 또는 사회당들이 대부분 무시했거나 왜곡한 맑스주의 이론의 핵심 쟁점 하나를 제기한다.

그런 단체들의 전략 — 제1차세계대전 전에 독일사민당에서 시작된 — 은 의회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가 기구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고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맑스는, 파리 코뮌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계급이 기존의 국가 기구를 인수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국가는 부르주아지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서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이용될 수 없었다. 오히려 기존 국가는 해체(분쇄)돼야 했고 노동계급이 창설한 새로운 국가 기구로 대체돼야 했다.

레닌은 맑스 국가론의 진수를 재발견하고 위대한 저작 《국가와 혁명》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것은 무엇

제주 한미FTA 협상 반대 시위대를 짓밟는 경찰들 — 이것이 경찰의 직무집행이다

보다 러시아 혁명에서 소비에트, 즉 노동자 평의회들의 권력을 통해 실행됐다. 그러나 나중에 스탈린주의의 지도를 받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사회주의로 가는 의회적 길과 기존 국가기구 인수라는 사상으로 되돌아갔다.

물론 군대·탱크·폭탄·전투기 등으로 무장한 현대 국가는 너무 강력해서 심지어 노동계급의 가장 큰 대중 운동으로도 도저히 분쇄할 수 없다는 반론이 흔히 제기된다.

약점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국가와 모든 지배 계급 권력의 결정적 약점 — 온갖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동계급 일부의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 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총은 그것을 사용할 병사가 필요하고, 모든 탱크에는 운전자가 필요하고, 모든 비행기에는 정비팀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국가기구에 는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하위직은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대중 혁명의 시기에는 노동계급의 압력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윗사람들과 결별하고 대중의 편에 서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국가는 분쇄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은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강제력뿐 아니라 동의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런 동의가 어떻게 유지되고 파탄나는가 하는 것이 다음 칼럼의 주제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이다.

안팎의 난관에 부딪힌 한미FTA

한국측 수석대표 김종훈은 4차협상이 작은 쟁점을 정리하는 ‘가지치기’이고 5차협상에서 빅딜을 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협상 결과를 보면, 연내 타결은 물 건너간 듯하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측이 기대한 미국측의 관세장벽 낮추기 문제에서조차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상품 양허안에서 농산물 개방, 자동차 관세 등 세제 개편, 섬유 개방품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져나왔다.

그럼에도 김종훈은 미국이 상품관세 분야를 70~80퍼센트 개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상당한 성과’라고 자찬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수출액 3백80억 달러 중 7.6퍼센트인 29억 달러(2조 7천5백억 원)에 해당하는 비중일 뿐이다.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를 다루는 무역구제에서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한국측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반덤핑을 없애 무역 구제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측 협상단은 이 쟁점을 다룰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FTA 덕분에 미국 수출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던 노무현 정부의 홍보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측이 히든 카드로 갖고 있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북한 핵실험 여파로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

한미FTA의 진정한 목적은 무역 증대 효과보다는 ‘외풍’을 이용한 구조조정에 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 이해영 정책연구단장은 “미국과 한국이 70~80퍼센트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별 의미 없다고 본다. 사실, 이런 공산품 관세 철폐보다 비관세 장벽에서 뭘 주고 받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도 “한국이 한미FTA를 통한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은 지적재산권·투자·전자상거래·경쟁·서비스투자 등의 분야다. 협상 전에 미국측은 인천공항공사 등 5개 공기업에 개방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또, 협상과

“경찰력으로만 유지되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한미FTA 반대를 외치는 제주 원정 시위대

정에서는 산업은행 등 13개 국책은행의 한미FTA 적용, 우체국 보험과 택배서비스 개방 등 11개 부문의 개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론

그러나 여기서도 약간의 ‘가지치기’는 있었지만, 진전된 내용은 거의 없었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외교통상부가 지적재산권 협상을 조속히 타결짓기 위해 법무부와 특허청의 관련 부처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폭로됐다. 외교통상부는 또, 보건복지부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요구를 들어 주라는 권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약값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텐데도 말이다.

3차협상에 이어 이번 협상에서도 이른바 ‘성과’가 없었던 첫째 이유는 한미 양국 자본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이다. 대기업의 사기업화, 규제완화 등을 두고 한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둘째이자 더 중요한 이유는 한미FTA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대 여론이다. 10월 30일 현재 범국민으로 취합된 한미FTA 반대 서

명자가 85만 명에 이르고, 찬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기도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50만 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받았고, 부산시당은 하루에 5만 명을, 울산시당은 3만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측 협상단이 쉽게 양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FTA 반대파들이 이 소동을 벌이는 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집권당 대표들은 어디 가서 숨었는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제 한미FTA 협상은 ‘일반적’ 협상 절차로는 내년 3월까지도 타결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다음 협상에서 빅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간첩단’이 한미FTA 반대 운동에 관여했다며 반대 운동의 흠집을 내려는 야비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FTA 반대 운동은 양국 민중의 권익을 침해할 한미FTA를 좌절시키기 위해 11월 22일 국민총궐기를 포함해 강력한 운동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정구

광범한 반대를 입증한 제주 투쟁

한미FTA 4차협상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나 범국민 모두 관심이 제주로 향했다. 노무현 정부는 9천여 명의 전경을 제주도에 긴급 배치했다. 경찰은 5백여 대의 차량과 헬기 등 각종 장비를 동원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정을 이용해 모의 훈련까지 벌였다.

이번 협상에서 감귤도 개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또, 범국민 제주본부는 협상장으로 가는 도로 양편에 “한미FTA 반대”가 적힌 노란 팻말을 수천 개나 걸어놓을 만큼 협상 반대 운동을 위해 꼼꼼히 조직했다.

4·3항쟁

10월 23일 협상장 주변 농민 집회에서는 1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모여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원정투쟁단 2천여 명을 포함해 제주도에서 1만 명이 넘는 규모의 인원이 모인 것은 1948년 4·3항쟁 이래로 처음이었다.

2천여 명의 원정시위대와 1만 명의 제주 농민들이 협상 기간 내내 중문단지를 향해 행진을 시도했다. 하지만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노무현 정부는 폭력으로 가로막았다. 하중근 열사를 살해한 바로 그 시위 진압 경찰들이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시위대들은 입을 모아 “경찰력으로만 유지되는 정부”라며 노무현을 비난했다.

이런 방해와 폭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대들은 협상 기간 내내 시위를 벌이면서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힘차게 제주에서 울려 퍼지게 했다.

이정구

미군 병사들이 이라크 철군을 요구하다

현역 미군들이 이라크 철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 주 초에 ‘이라크 전쟁 시정을 위한 청원(An Appeal for Redress from the War in Iraq)’ 운동을 시작한 이 군인들은 자신들의 사이

트에 게재된 호소문을 통해 “이라크에 있는 모든 미군과 기지들의 즉각 철수를 지지할 것을 의회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중히 촉구”했다.

“이라크 주둔은 아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가치도 없습니다. 이제는 미군이 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이 운동을 시작한 병사들은 사이트 개설 후 며칠 만에 서명 참가자 수가 65명에서 2백19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쟁 반대 참전군인들’, ‘평화재향군인회’, ‘전쟁 반대 군인가족들’ 같은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2005년 2월까지 이라크에서 복무한 한 해병대 부사관은 “불만의 진정한 원인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알 카에다와 후세인 정권의 연관성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대체 왜 우리가 이라크에 머물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점령은 더 많은 폭력을 부르고 있다. 점령은 우리에게 아무 득도 되지 않는 반면 너무나 많은 이라크 민간인들과 미군 병사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명운동은 비번인 군인들이 의회에 개인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방부의 ‘군 내부제보자 보호 규칙’

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라크에서 복무중인 14만 명의 군인들이 서명에 참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여론조사 기관인 ‘조그비’가 이라크 주둔 현역 미군들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무려 72퍼센트의 이라크 주둔 미군이 연내 철군을 원했고, 29퍼센트는 즉각 철군을 원했다. 이것은 미국 국민들의 철군 여론보다 높은 수치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의 정당성은 미국 안에서뿐 아니라 이라크 전선에서도 무너지고 있다.

김용민